

광주 병원들 항생제 오남용 심각하다

10곳 중 8곳 수술 전·후 과다 처방... 전남대병원 등 3곳만 '1등급' 전남 46곳 중 화순전대병원·여수백병원 1등급... 42곳 '3등급 이하'

광주 지역 병원 다섯 곳 중 네 곳은 수술 전·후 항생제를 오·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남 지역에서는 병원 열에 아홉은 항생제를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30일 발표한 '수술 예방적 항생제 사용 적정성 평가 결과'에서 확인됐다.

심평원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3개월 동안 전국 998개 병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각 병원에서 진행된 고관절치환술, 담낭수술, 대장수술 등 18가지 수술 과정을 항생제 최초 투여 시기, 적절한 항생제 선택 여부, 투여 기간, 의무기록 일치율 등 4가지 지표로 평가했으며 각 평가 지표 점수를 모아 종합 점수를 산출, 1~5등급으로 등급을 매겨 공개했다.

평가 결과 광주에 있는 50개 병원 중 1등급을 받은 곳은 빛고을전대병원, 전대병원, 조대병원 단 3

곳뿐이었다. 이들은 수술 전 1시간 이내에 항생제를 투여하고, 각 수술 종류별로 적절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모든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광주기독병원, 광주보훈병원, 문화여성병원, 밝은안과21병원, 서광병원, 신가병원 등 6곳은 2등급을 받았다. 이들 병원에서는 일부 수술 과정에서 24시간이 지난 뒤에도 항생제를 사용하거나 의무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견됐다.

광주 전체 병원의 78%에 해당하는 41개 병원은 3등급 이하를 받았다. 광주씨티병원, 광주새우리병원, 광주OK병원 등 17곳은 3등급을 받았으며 KS병원, 광주수원병원, 광주한국병원 등 16곳은 4등급을 받았다.

광주동림병원, 대중병원, 새나래병원, 광주열린병원 등 8곳은 최하점인 5등급을 받았다.

이들 병원은 수술 1시간 이전부터 항생제를 투여하거나 수술 완료 24시간 이후에도 항생제를 지속

투여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받았다. 수술 부위에 따라 감염이 예상되는 병원군이 다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적합하지 않은 항생제를 사용하기도 했다.

전남에서는 항생제 오·남용 우려가 더욱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총 46개 병원 중 1등급은 화순전대병원·여수백병원 2곳, 2등급은 여수전남병원, 현대여성아동병원 2곳에 그쳤으며 3등급 이하인 병원이 42곳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기독병원, 목포한국병원, 성가톨릭병원 등 12곳이 3등급을 받았으며 4등급은 구례병원, 나주종합병원, 미즈여성아동병원, 빛가람종합병원 등 17곳이었다. 5등급을 받은 병원은 강남병원, 광양사랑병원, 여수한국병원, 녹동현대병원, 해남종합병원 등 13곳에 달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수술 전·후 항생제 사용은 수술 부위 감염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거나, 오·남용할 경우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슈퍼 박테리아'를 만드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슈퍼 박테리아가 늘수록 수술·치과나 작은 상처로도 세균에 감염될 위험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고교 기숙사 휴대전화 사용 제한 인권 침해”

인권위, 광주·전남·북 32곳에 규정 개정 권고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의 행동자유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광주시·전남도·전북도 소재 32개 국·공립고등학교에게 학생 휴대전화 수거 및 사용 제한을 중단할 것과 기숙사 내 휴대전화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교육감, 전남도교육감, 전북도교육감에게 권고 대상 학교가 인권위의 권고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할 것도 요구했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조사 중 고교 기숙사에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광주시·전남도·전북도 소재 국·공립고교 중 기숙사가 있는 150개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직권으로 실체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광주·전남에서 기숙사를 운영 중인

101개 고교(광주 8곳·전남 93곳) 중 26개교가 학생 휴대전화를 수거했고 8개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의 경우 37개 기숙사운영 고교 중 12개 학교가 휴대전화를 수거·제한했다. 학교 대부분은 취침 전 휴대전화를 수거해 아침 점호 때 돌려줬다. 하지만 일부 학교는 기숙사 입소하는 날(월요일) 수거해 외출하는 퇴소(금요일) 날 돌려주는 예도 있었다.

학교 측은 ‘수면권 보장’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데 따른 수면시간 부족으로 다음 날 학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학생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절제하는 법을 익혀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학교 측이 학생에게 별점을 부과하거나 기숙사 퇴소 조치를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적절한 지도방식이 아니다”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부상 당한 꽃사슴 어디서 왔을까

광주 북부소방, 구조 뒤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인계

광주에서 꽃사슴(사진)이 구조됐다.

지난 29일 정오께 광주시 북구 용전동 마을 야산에 사슴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다리를 절뚝거리는 꽃사슴을 발견하고 약 1시간만에 붙잡았다. 구조된 사슴은 왼쪽 다리에 다른 동물에 의해 물린 자국이 있었다. 또한 무언가에 많이 놀란 상태였다고 소방은 전했다.

소방관들은 담요를 덮어 사슴을 진정시킨 뒤 관련 절차에 따라 북구에 인계했다. 북구는 처음 사슴농장에서 탈출한 사슴이라 여기고 주인 찾기에 나섰지만, 인근에 사슴농장이 없고 분실 신고도 접수된 바가 없어 일단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로 넘겼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추석맞이 5·18묘지 단장 30일 오전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회장 허정) 봉사원, RCY단원 등 120여명은 광주시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추석맞이 비석담기 및 조화교체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나명주기자mjna@

조선대 “민영돈 총장 징계보다 수시모집 먼저”

징계여부 수시 이후로 미뤄져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조선대 민영돈 총장에 대한 징계가 수시모집 이후로 미뤄졌다.

조선대학교 법인 관계자는 “법인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민 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회가 신입생 수시모집이 끝나는 9월17일 이후에 열릴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그는 “9월13일부터 17일까지 2023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기간인 점을 고려해 징계위원회 소집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대학의 가장 큰 현안인 학생모집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조선대 법인 김이수 이사장은 지난 24일 민 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징계 범위에는 파면, 해임, 정직이 해당된다.

법인 이사회는 민 총장이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단과대학장 등에 대한 징계안을 이사회에 올리라는 지시를 거부한 것을 두고 사립학교법을 위반해 징계 대상이 된다고 판단, 지난 7월 징계를 의결했다.

광주교육청, 유병길 감사관 임명

광주시교육청은 개방형직위인 감사관(3급)에 유병길(64) 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관을 오는 9월 1일자로 임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유 신임 감사관은 “정렬한 조직문화 강화와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부정부패 예방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시교육청의 감사역량을 한 단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 출신인 유 감사관은 순천 매산고를 졸업했다. 이정선 교육감과 고교 동기 동창으로 알려졌다. 유 신임 감사관의 임기는 2년이다.

유 신임 감사관은 1978년 경남선거관리위원회에 9급으로 입사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 열려

광주에서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관련 정책포럼이 열렸다.

30일 광주시 서구 갈매중컨벤션센터에서 산업계·학계·연구계 및 광주지역 인사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정책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은 사용후핵연료 감식저장의 안전성과 저장시설 확충을 위한 전문가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가 후원했다.

이날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국동학 한국원자

력연구원 핵연료안전연구부 책임연구원은 “건설적 저장은 별도의 전원 없이 자연대류를 통해 냉각하기 때문에 지진 등의 자연재해, 나아가 테러와 같은 인재에도 안전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강문자 학회장은 “방사성폐기물 문제의 해결에 있어 주민과 국민의 설득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기술 수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행 가능한 기술을 정확한 데이터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포럼은 ‘원전해제’를 주제로 오는 9월 말 개최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